

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·감리 실적 및 감독방향

- 금융감독원, 2021. 2

- ◆ (개요) 금감원은 상장회사 등의 매년 재무제표 자진수정 현황을 점검하고 중요 회계오류 수정회사에 대해서는 심사·감리를 실시하고 있는 바, 그 간의 심사·감리 실적 및 향후 감독방향 등을 안내
- ◆ (심사·감리 실적)
 - (조치회사수) '15년부터 '20년 9월까지 총 78사에 대하여 조치
 - ※ 연도별 조치내역
('15년) 1사 → ('16년) 10사 → ('17년) 4사 → ('18년) 16사 → ('19년) 27사 → ('20.9월 말) 20사
 - (수정내역) 78사는 회계오류를 감사보고서 재발행(38사, 48.7%) 또는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등(40사, 51.3%)의 방식으로 수정하였고, 이 중 62사는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회계오류를 수정
 - (위반동기) 과실 위반 비중이 62.8%(49사)인 바, 이는 주로 담당자의 착오 또는 회계기준에 대한 이해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
 - (소요기간) '20년 현재 심사·감리 착수부터 조치까지 평균 9.5개월이 소요되어 전년도('18 : 12.1개월, '19 : 10.1개월)에 비하여 감소 추세
 - 이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('19.4.)에 따라 과실위반 회사에 대하여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한 영향(총 17사, 평균 3.3개월)
- ◆ (감독방향) 기업의 회계오류 예방을 위해 향후에도 수정실태 점검 후 신속하게 심사·감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
 - 아울러 다년간 누적된 오류를 일시에 비용처리하여 심사·감리를 회피하는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, 전·당기 감사인 및 회사 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

I 개 요

- 금융감독원은 '14년부터 매년 상장회사 등의 재무제표 수정현황을 점검하여 재무제표 심사 등을 실시하고 있는 바,
 - * 회사가 공시된 재무제표를 자진하여 수정하는 경우, 그 수정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이상인 경우 등에는 재무제표 심사 실시 가능
 - 그 간의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심사·감리 실적을 공개하고,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회계오류 수정기업 관련 감독방향을 안내

II 심사·감리 실적

1 조치 회사수

- 회계오류 자진수정 기업을 점검하여 심사대상을 선정한 후, '15년에 최초로 자진오류수정 관련 위반에 대하여 조치하고, '20.9월까지 5년간 총 78사의 회계오류 수정사항에 대하여 조치
 - 심사대상 선정범위를 정교화*하여 선정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노력을 하였고,
 - * ('17년) 점검대상 확대 (상장회사 →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전체)
 - ('18년) 사업보고서 재무사항 점검 시 감사보고서 상 오류수정 여부 점검
 - 新외감법 도입·시행에 따라 회사 및 감사인이 결산 및 회계감사에 신중을 기한 결과, 과거 회계오류를 수정하는 기업이 '18년 이후 증가

〈연도별 조치회사수〉

(단위: 사)

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(9월 기준)
회사수	1	10	4	16	27	20

2 회계오류 수정내역

- (수정방식) 상기 78사는 감사보고서 재발행(48.7%) 또는 비교표시 전기재무제표 재작성 등(51.3%)의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
 - 오류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 감사보고서 재발행 방식으로 수정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
 - 중요성 기준금액* 대비 16배 이상의 오류를 수정한 회사 중 66.7%가 감사보고서 재발행 방식으로 오류를 수정
 - * 재무제표 상 회계정보의 누락 또는 왜곡으로 인해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



고 보는 기준금액

〈회계오류 수정방식〉

(단위: 사, %)

중요성금액 대비 오류금액 규모	감사보고서 재발행	비교표시 전기F/S 수정 등 *	계
16배 이상	12 (66.7)	6 (33.3)	18
16배 미만	26 (43.3)	34 (56.7)	60
계	38 (48.7)	40 (51.3)	78

* 전기오류수정손익 계상 방법 포함

- (수정내용) 수정회사 중 62사*(79.4%)가 자기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오류(A유형)를 수정

* 오류를 다수 수정한 회사의 경우, 이중 A유형 오류가 1개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

〈회계오류 수정내용〉

(단위: 사)

회계오류 종류	회사수
자기자본·손익 관련 오류 (A유형)	62
수익·비용, 유동·비유동 분류, 영업현금흐름 관련 오류 등 (B유형)	7
특수관계자 거래, 담보제공 관련 주식 누락 (C유형)	7
기타 계정분류, 주식 관련 오류 등 (D유형)	2
계	78

3 조치내역

- (개황) 자진 오류수정과 관련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78사 중
-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59사, 코넥스시장 상장사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은 19사
 -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('19.4.) 이후에 19사에 대하여 심사에 착수하여, 17사는 경조치 종결(금감원장 전결), 2사는 증선위 조치(고의·중과실 위반)

〈연도별 조치회사수〉

(단위: 사)

구 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	'20년 (9월말 기준)	계
전체 조치회사수	1	10	4	16	27	20	78
유가·코스닥	1	9	4	10	22	13	59
코넥스·비상장	-	1	-	6	5	7	19

심사제도 도입 후	-	-	-	-	8	11	19
증선위 조치	-	-	-	-	-	2	2
금감원장 경조치	-		-	-	8	9	17

□ (위반동기) 위반회사 중 고의 위반은 6사(7.7%)이고, 중과실 위반은 23사(29.5%)이며, 과실 위반이 49사(62.8%)

○ 新외감법 시행('18.11.1.)에 따른 조치양정기준 개정('19.4.1.) 이후 중과실 적용 요건이 엄격해짐에 따라 과실 조치 비중이 크게 증가

* 위반금액이 중요성 기준금액의 4배 미만 시 원칙적으로 과실로 판단

〈연도별 조치회사수〉

(단위: 사, %)

	'15~ '17년	'18년	'19년	'20년 (9월말)	계
조치회사	15	16	27	20	78
고 의	1	3	-	2	6 (7.7)
중과실	8	5	8	2	23 (29.5)
과 실	6	8	19	16	49 (62.8)
과실 비중 (%)	40	50	70.4	80	62.8

4 조치 소요기간

□ (전체) 78사의 심사·감리 착수부터 조치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9.7개월

○ 조치대기기간* (2.9개월)을 제외한 평균 감리기간(심사 포함)은 6.8개월

* 금감원에서 증선위 안건의 상정을 요청한 후부터 최종조치까지의 기간

□ (연도별)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('19.4.) 후에 과실* 위반회사에 대하여는 경조치로 신속히 종결함에 따라 소요기간이 단축

○ 연도별 평균 소요기간은 '18년 12.1개월, '19년 10.1개월 및 '20년 9.5개월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

* 조치양정기준 개정에 따른 과실 비중 증가의 영향도 있음



〈평균 조치소요기간〉

(단위: 개월, 사)

기 간	전체	연도별			
		'17년	'18년	'19년	'20년 (9월말)
감리(심사)	6.8	5.3	8.3	6.6	7.1
조치대기	2.9	2.0	3.8	3.5	2.4
평균 소요기간 (회사수)	(78)	(4)	(16)	(27)	(20)

- (감리 조치) 감리 착수* 후 증선위 조치(61사)까지 평균 11.5개월 소요, 이 중 감리기간은 7.8개월, 조치대기기간은 3.7개월

* 감리 착수 전에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심사 착수일 기준

- 재무제표 심사 조치(17사)의 경우 평균 3.3개월 소요

(단위: 월, 사)

기간	감리	심사	전체
감리(심사)	7.8	3.3	6.8
조치대기	3.7	-	2.9
평균 소요기간 (회사수)	11.5 (61)	3.3 (17)	9.7 (78)

III

향후 감독방향 및 유의사항

1 회계오류 수정기업에 대한 신속한 심사 실시

- 향후에도 주기적(연간 1~2회)으로 회계오류수정 기업을 점검하고, 중요한 수정 회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심사 실시 예정
- 담당자의 착오 또는 복잡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 등 과실로 인하여 회계오류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,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할 예정

- ➡ 회사는 사업보고서 공시 이후 회계오류를 발견하는 경우 신속하게 수정하여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
- 회계오류 발견 시 감사인에게 신속하게 통보하고, 감사인은 재감사 및 감사보고서 수정 여부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

2 일시 비용처리 등 심사회피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

- 과거 다년간 누적된 회계오류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대신 일시에 비용(손실)으로 처리하는 등 심사·감리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어,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

➡ 장기간 지속된 회계오류의 경우 정보이용자들이 오류사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, 회계처리기준*에 따라 회계기간별로 오류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등 수정내용을 충분하게 공시할 필요

* 회계오류 수정·공시가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, 회계오류 자진수정에 따른 조치기준 감경 적용 곤란

3 전·당기 감사인 및 회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실시여부 검토

- 감사인이 변경된 후에 전기 감사인이 감사한 재무제표를 수정하는 경우, 전·당기 감사인 및 회사 경영진 간에 충분한 커뮤니케이션*을 거쳐 수정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

* 「전기오류수정에 관한 회계감사실무 지침」에서는,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전·당기 감사인, 경영진은 ① 전기오류사항에 대한 각자의 검토내용 및 결론, ② 전기재무제표 수정방식 등에 대하여 3일간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도록 의무화

➡ 당기감사인은 전기감사인 및 회사 경영진과의 충분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회사 회계처리의 오류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감사보고서에 수정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할 필요

4 주기적 회계심사·감리 실적 공개

- 상장회사, 감사인 및 정보이용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, 회계오류 자진수정 관련 심사·감리 결과를 주기적*으로 공개 예정

* <예시> 3년에 1회 이상 심사·감리실적 공개

- 주요 재무제표 수정사례, 조치실적 등을 공개하여 상장회사 등이 유사한 회계오류를 반복하지 않도록 유도하고,
- 투자자 등 정보이용자가 상장회사 등의 재무정보 이용에 있어 보다 유용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